

이슈브리프 865호
(2026. 7.16)

미·이란 양해각서의 와해와 호르무즈 위기의 재점화: 한국에 대한 함의

제865호

고명현 mhgo@inss.re.kr



국문초록

2월 28일 개전한 미국·이란 전쟁은 4월 8일의 휴전과 6월 17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력 충돌 국면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외교적 합의보다는 전쟁의 빠른 종결 모양새를 연출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과 책임 추궁의 분산 목적으로 설계된 양해각서와, 이 구조를 도리어 압박 수단으로 전환하여 미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만능의 보검'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공고히 하려는 이란의 계산이 깔려 있다. 하메네이 사후 실권을 장악한 이슬람혁명수비대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정통성 확보, 억제력 재건, 해협 통행 수익화라는 세 개의 실존적 동기가 수렴하기에 애초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반면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력에 의한 해협 재개방도, 통행료의 명시적 용인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양측 모두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 통제를 국제사회에 기정사실로 하려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상 양측의 충돌은 60일 협상 기간이 만료하는 8월 중순 변곡점을 찍고 11월까지 상승 곡선을 그릴 공산이 크다. 다만 오만이 제안한 '말라카 해협 협력체'를 모델로 한 자발적 '기여금' 방안은, 이란의 기대 수익과 미국의 레드라인 사이의 현격한 간극에도 불구하고 양측 입장이 절충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에서 변수로 작용한다. 더욱 심각하게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분쟁의 초점이 비핵화에서 호르무즈 통제로 옮겨가면서 석유의 상당 부분을 호르무즈를 통해 수입하는 한국이 이란의 새로운 압박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개전 초 이란이 걸프 동맹국을 파상공세의 인질로 삼아 미국을 압박했듯이,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석유에 의존하는 미 동맹국이 이란 초크포인트 전략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이슈브리프는 호르무즈 위기가 에너지 수급의 문제를 넘어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은 미 동맹국을 겨냥한 이란의 하이브리드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경제안보적 대응에 더해 유사 입장국과 다자 공조, 그리고 예상되는 미국의 동맹 기여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언한다.

키워드: 미국, 이란, 미·이란 양해각서, 호르무즈, 경제안보, 트럼프

서론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으로 공격을 개시한 지 100여 일, 그리고 4월 8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된 뒤 지루한 협상이 60여 일간 이어진 끝에, 6월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에 합의했다.¹⁾ 두 달 넘는 협상의 결과물이 잠정 합의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협상하겠다는 틀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재 미·이란 분쟁의 성격과 전망을 정확히 시사한다.

열네 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양해각서는 적대행위의 즉각 종료, 호르무즈 해협의 60일간 무료 통행 재개, 이란 항만 봉쇄 해제, 원유 제재 면제와 동결 자산 해제를 서명 즉시 발효시켰다. 반면 핵 물질 처분, 향후 농축 범위, 3,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재건 계획 등 정작 핵심 전략 쟁점은 모두 60일 후 “상호 합의”에 따른 후속 협상으로 미뤄 놓았다. 미국이 이란에 주는 양보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데, 이란이 미국에 내놓아야 할 양보는 유예된 데다 조건부이다.

미 조약에는 이미 이 양해각서가 항구적 합의가 아니라 일시적 휴전에 불과하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공화당 강경파는 “이란에 대한 거의 전면적 항복”이라 비판하고,²⁾ 민주당 역시 핵 문제를 의제에조차 올리지 못한 채 제재만 풀어 준 임시방편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이란 간 쟁점은 더 이상 비핵화가 아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에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1) CNN. (2026, June 17). "US releases official agreement with Iran. Read the 14-point text."

2) Washington Examiner. (2026, June 17). "Leaked versions of the Iran MOU appear to confirm Tehran got everything it wanted."

걸프 산유국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면서 미국의 전략 목표를 비핵화에서 에너지 공급망 보호로 뒤집어 버린 결과, 분쟁의 무게중심은 이란 비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둘러싼 주권 다툼으로 옮겨갔다.

현재의 충돌이 보여주는 것은, 트럼프가 최소한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 두려 했던 궁극적 타결, 또는 문제 ‘해소’의 시계가 그의 바람과 달리 훨씬 빨리 돌고 있다는 점이다. 첨예한 협상 타결보다 트럼프의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둔 양해각서는, 이란 정권을 장악한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트럼프에게 시간 벌여주기를 거부하면서 도리어 미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바뀌었다.

문제는 호르무즈에 관해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에 호르무즈 통행권을 이란에 넘기는 것은 전후 국제 해양 질서의 근간인 해상 지배력을 포기하는 일이며, 중동을 넘어 전 세계적인 영향력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대공망이 무너진 이란에 호르무즈 통제권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권 생존이 걸린 마지노선이다.

이란의 마지막 보루와 트럼프의 딜레마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6월 25~28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오만 항로의 선박을 타격하자 미국이 해안 시설을 보복 타격했고, 이란은 다시 쿠웨이트·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³⁾ 이후 양측은 확전을 자제해 왔으나, 7월 7일 이란이 다시 오만 항로의 유조선들을 공격하자 미군이 80여 개의 이란 내 표적을

3) NPR. (2026, June 27). "U.S. and Iran each announce retaliatory strikes in Iran, Kuwait and Bahrain."

보복 타격했고 14일에는 트럼프가 호르무즈 재봉쇄를 선언하였다. 이란의 드론·미사일 대응 역시 규모와 범위를 모두 확대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⁴⁾

6월 17일 발효된 양해각서는 표면적으로 이란에 유리하게 작성된 합의이다. 14개 조항 가운데 핵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조항은 단 두 개 뿐이고, 트럼프가 개전 명분으로 내세웠던 탄도미사일 역량 제거나 대리 세력에 대한 제한은 아예 양해각서에 없으며, 나머지는 미국이 이란에 제공할 양보의 내용과 절차로 채워져 있다. 이행 순서도 이란에 유리하다. 미국이 30일 내 이란 선박 봉쇄 해제와 미군 철수 일정 확정(제4조), 원유 수출 제재 면제와 금융·보험·운송 서비스 복원(제10조), 동결 자산의 완전 해제(제11조)를 이행해야만 이란이 60일간 호르무즈 무료 통행을 보장한다(제5조). 정작 핵심 쟁점인 핵 협상 및 보상(제6조~제9조)은 제13조의 순서 조항에 따라 이 선제 이행이 완료 및 유지된 뒤에야 시작한다.

이렇게 유화적인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강경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전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후 실권을 장악한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선명성 경쟁과 권력 투쟁이다. 최고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후계자로 옹립했지만, 전시의 졸속 승계라는 절차적 흠결에 더해 지난 1월 경제난 시위를 유혈 진압한 전력까지 겹치면서 그 정통성은 안팎에서 도전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정통성 수단은 대외 위협 세력인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이다. 이란의 가장 최근 공격이 “타협도 항복도 없다”라는 구호로 연출된 하메네이 장례식 기간 중인 7월 7일에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4) CNBC, (2026 Jul 8). "U.S., Iran trade fresh strikes"

둘째 동기는 억제력 재건이다. 수뇌부 궤멸, 방공망 붕괴, 대리 세력 와해로 이란의 기존 억제 체계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트럼프의 표현대로 “산 밑 깊숙이” 묻혀 “핵 먼지(nuclear dust)”가 된 핵 프로그램은 당장은 유효한 억제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자극하는 골칫거리에 가깝다.⁵⁾ 이란에 남은 유일한 억제력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실증된 능력뿐이다.

셋째 동기는 호르무즈 해협의 수익화다. 미 투자은행 JP모간은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을 수익화하면 연간 최대 700~900억 달러의 통행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이란의 대외경제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혁명수비대에게 놓칠 수 없는 외화 수입원이다.⁶⁾ 암호화폐 기반 보험 상품과 승인된 항로, 통행 허가 체계는 일회성 통행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화의 토대이다.⁷⁾ 결국 호르무즈 통제를 통한 억제력과 수익은 이란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자산으로 이에 대한 미국과 타협은 애당초 불가능에 가까웠다.

현재 이란의 동기는 명확하고 일관되며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 트럼프는 협상 타결 여부가 이란의 선택에 달린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선택의 기로에 선 쪽은 트럼프이다. 해협을 무력으로 다시 열자니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급등과 전쟁 재개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통행료를 명시적으로 용인하자니 미 조야는 이를 사실상 이란에 대한 굴복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5) CNN, "Trump now claims Iran has already been denuclearized", 9 Jul 2026.

6) The Jerusalem Post, "Heat, costs, shortages: US faces limits in deciding next actions in Iran - report" 7 April 2026.

7) Bloomberg, "Iran Starts Bitcoin-Backed Ship Insurance for Hormuz Strait", 18 May 2026.

따라서 현재의 정세 불안정은 이란이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이란은 미국과 합의를 지향하기보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 통제와 통행료 징수를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받고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도발과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과 양해각서의 설계 논리

트럼프가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양보하고 이란이 수락하는 구조의 양해각서는 얼핏 민주당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의 발언처럼 “사실상의 굴복”으로 보인다.⁸⁾ 그러나 이 양해각서의 궁극적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와 이란 비핵화를 위한 합의보다는, 협상의 연쇄적 유예를 통한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 보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이란전으로 인해 크게 나빠진 비판 여론의 분산이다. 트럼프는 밴스 부통령을 협상의 전면에 내세워 전쟁의 정치적 비용 중 일부나마 자신에게서 분리하였다. 트럼프의 “잘되면 내 공, 안 되면 JD 탓(if it doesn't work out, I'm blaming JD)”이라는 뼈있는 농담은⁹⁾ 양해각서의 정치적 리스크 전가 구조를 정확히 요약한다.

더 중요한 측면은 트럼프의 정치적 유연성 확보다. 양해각서의 협상 틀은 합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보다는 이란과의 협상 실패 시 그 책임이 트럼프에게 돌아갈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미국이 이란에 약속한

8) Coons, C. (2026, June 15). "Ranking Member Coons statement on announced U.S.-Iran agreement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U.S. Senate.

9) CNN. (2026, June 19). "'If it doesn't work out, I'm blaming JD': Vance's risky gambit on Iran peace efforts."

전문학적인 경제 보상 조항이다. 양해각서는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호르무즈 봉쇄 해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독자·양자 제재 및 모든 자산 동결 조치의 전격적 해제뿐만 아니라 이란 GDP의 100%에 육박하는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이라는 파격적인 보상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란은 오랜 기간 강력한 제재 아래서도 핵개발을 추진하였기에 경제적 유인책만으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호르무즈 봉쇄 해제는 이란이 미국에 대해 가진 유일한 압박 수단의 무장해제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경제적 보상책과 등가교환을 제시한 데는 오히려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될 것을 예상하고 그 책임을 이란의 비협조로 돌리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부하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인 보상까지 내밀었는데도 이란이 응하지 않았다는 서사가 성립하는 순간, 협상 결렬은 트럼프의 실패가 아니라 “파격적 제안을 건어찬 이란”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점과 대외적 모양새, 그리고 명분이다. 이란은 도발과 긴장 확대를 통해 양해각서에 설계된 유예 구조를 한계까지 밀어붙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수사적 대응과 제한적 타격에 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는 7월 8일 “휴전은 끝났다” 라고 선언하면서도 이란과의 협상 지속에는 합의했고, 미군의 대응 역시 타격을 제한해 외교가 작동할 시간을 주는 방식이다.¹⁰⁾ 양해각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기에는 아직 정치적으로 유용하고, 이란의 도발 역시 전쟁 재개의 명분이 성립할 만큼 임계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 CNN live blog, “Mediators work to de-escalate US-Iran tensions”, 10 Jul 2026.

분쟁의 변곡점과 절충 가능성

이란과 미국 간 새로운 분쟁은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6월 25~28일 이란의 상선 공격과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미군 시설 공격으로 재개됐고, 7월 7일부터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교전이 확대되면서 충돌이 구조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2월 말~4월 초의 전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스스로 전면전 복귀가 목표는 아니라고 밝혔고, 이란 역시 “전면 방어” 태세를 공언하면서도 협상 재개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어, 양측 다 전면전보다 교착을 선호하는 형국이다.¹¹⁾

당장 임박한 변곡점은 8월 17일이다. 이날 양해각서의 60일 호르무즈 무료 통행 기간이 만료되면서 해협 통과에 유료화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 유료화를 공식화하여 트럼프에게 개전 명분을 제공하기보다는 선별적 단속과 중국 등 우호국에 대한 차등 혜택 같은 회색지대 전술로 통행료 체제의 기정사실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또한 간헐적 타격, 상선단 호위, 2차 제재 등으로 대응하겠지만 중간선거 전까지는 미국 측 대응에 상한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잘 아는 이란이 11월까지 도발의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다. 한국을 비롯한 호르무즈 통행 국가들은 미 재무부 지정 테러 단체인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에 통행료를 내고 2차 제재를 감수할지, 아니면 비승인 항로를 이용하여 이란의 공격에 노출될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다만 외교적 타협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오만은 2007년 국제 해사기구(IMO) 주도로 항행 보조시설 유지비 충당을 위해 설립된

11) Al Jazeera, "US-Iran war: Will peace talks resume, and when?" 10 Jul 2026.

말라카 해협 협력체¹²⁾를 명시적 모델로 삼아 해운사가 서비스 요금을 내는 방안, 즉 이란의 통행료가 아니라 유지·관리 기금에 대한 자발적 기여를 제안했고, 유럽 국가들은 요금이 비강제적이고 국제 해사기구(IMO)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 아래 이를 검토하고 있다.¹³⁾ 반면 미국은 형식이나 명칭과는 무관하게 해협 통행의 수익화 자체를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¹⁴⁾ 이 절충안이 8월 17일 이전에 미-이란 간 극적인 타결을 가능케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호르무즈 통행료를 어떻게 명명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액수이다. 말라카 해협 협력체 설립 이후 15년 넘게 누적된 ‘항행 안전기금’은 총 2,300만여 달러로 JP모간이 추산한 연 700~900억 달러의 통행료 기대 수입과는 수천 배 차이가 나는 규모다. 자발적 형태의 기여금이 너무 적으면 이란은 다시 무력 위협을 통해 ‘통행료’ 징수에 나설 것이고, 반대로 이란의 기대치에 맞춰 통행료를 책정하게 되면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게 된다는 점에서 양측의 간극은 매우 크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통행료 명목으로 화물 가액의 20%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은 실제 계획이라기보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 위협에 대한 맞불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¹⁵⁾

양해각서 체결 초기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레바논 변수는 호르무즈 통행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심화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졌으나, 여전히 유효한 중장기적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6월 26일 미국 중재로 체결된 이스라엘-레바논 합의 틀을 헤즈볼라는 이미 무효 선언했고, 양해각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12) The Cooperative Mechanism for the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13) The News International, "Europe reviews 'Malacca-based' proposal to charge ships in Strait of Hormuz", 11 Jul 2026.

14) KBS뉴스 “미국 “미국인은 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 낼 수 없어” 2026년 4월 29일

15) 중앙일보 “트럼프가 꺼낸 20% 통행료 ‘1척당 450억’.. 호르무즈 선박들 ‘강도냐’” 2026년 7월 14일

거듭 강조해 온 이스라엘은 레바논 장기 주둔 의사를 재확인했다.¹⁶⁾ 향후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이란이 타협점을 찾더라도 레바논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양해각서에 내장된 긴장 구도와 불안정성은 분쟁 재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의 중동산 원유에 대한 구조적 의존 탓에 호르무즈 문제가 에너지 안보를 넘어 미·이란 외교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의 초점이 비핵화에서 호르무즈 통행으로 옮겨가면서 에너지 수급 위기를 단순히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 경제의 호르무즈 초크포인트 취약성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 한국 수입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이고, 그중 약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다.¹⁷⁾ 따라서 이란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함께 한국을 미국의 취약점으로 인식하고 공략해 올 가능성이 크다. 양해각서 이전의 이란이 친미 걸프 국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대미 지렛대로 썼다면, 양해각서 이후의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을 압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8월 이후 상황이 단순히 경제안보 위기가 아닌 한국을 표적으로 한 외교·군사 위기로 비화할 수 있는 이유다.

당장 이란의 압박은 8월 17일 무료 통행 기간이 만료되면 본격화할 수 있다. 이란은 한국 등 미 동맹국을 압박해 미국과 연대를 약화하고,

16) Times of Israel. (2026, June 28). "Hezbollah says Israel-Lebanon agreement 'null and void'; Israel said bracing for attack."

17) 경인방송,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마비'...한국 원유 수급 비상등", 2026년 3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 선례를 굳히며, 이슬람혁명수비대 연계 기관과 거래를 강요해 제재를 무력화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공고히 하려 할 것이다. 여기서 예상되는 이란의 선별적 특혜와 압박은 동맹국을 미국에서 분리하는 효과까지 노리는 전형적 ‘썬(wedge)’ 전략으로, 현재 일어나는 호르무즈 통과 상선에 대한 회색지대 공격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이란의 위협이 더 가시화되기 전에 한국과 유사한 입장인 EU·일본·인도와 공동 대응 태세를 선제적으로 조율해 이란의 위협에 다자 구도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도 호르무즈 자유 통행에 대해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3월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예상되는 요구는 호위 전력 파견, 소해 전력 지원, 걸프 지역 방공 자산 전개, 작전 비용 분담으로 구체화할 공산이 크다. 당장 8월 이후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격화되면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의 대안으로 한국에 미 해군의 선박 호위 임무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

관건은 미국의 요구가 공식화되기 전에 참여의 범위와 성격을 선제적으로 정의해 두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참여의 대가로 미국산 원유의 우선 배정 등 구체적 반대급부를 미리 교섭해야 한다. 일본과의 사전 조율도 필수다. 한·일이 참여 기준선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대미교섭의 구도가 개선된다.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정형적 해법은 공급망 다변화이다. 그러나 非 중동산 원유는 수송 시간, 수량, 경제성 측면에서 중동산 원유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략비축유를 최소 소비가 아닌 실질

소비를 기준으로 확대하고, 중국의 최근 중동 상황의 악화를 염두에 둔 헬륨 수출 중단 조치처럼¹⁸⁾ 원유 비축 외에도 휘발유·경유·항공유·나프타 등 정제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¹⁹⁾ 중장기적으로 UAE·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우방국에 대한 방위산업 협력과 인프라 복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놓으면 분쟁 재개 시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할 역할 분담에 대한 교섭력을 미리 확보하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란의 압박은 EU·일본·인도 등 유사 입장국 간 공조를 통해 다자 구도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는 동맹 내 역할 분담의 조건을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석유제품의 전략적 비축과 공급선 다변화로 버틸 시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분쟁 재개가 ‘만약’이 아니라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역시 위기 발발 후 수습이 아니라 위기 전의 사전 포석이어야 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8) 연합뉴스 “中,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 ‘헬륨’ 수출 금지” 2026년 7월 11일

19) 중앙일보 “원유 ‘공급쇼크’ 온다…비축유로 버텨도 한국 4~5월 위기설” 2026년 3월 18일